

· 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2022. 7월 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2012~2021년)는 네이버카페 '김재준 행정학'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1. 다음 중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치는 사항
- ②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③ 해당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④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⑤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문 2.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필수적결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신임 의결
- ② 사무국장의 선출
- ③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④ 예산의 심의 및 편성
- ⑤ 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정답 및 해설

1. ①
·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제1항: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2. ③
· ③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은 없다.
· ② 의회 사무국장 등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한다.
· ④, ⑤ 예산의 편성 및 규칙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문 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층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업무상 지연이 빈번히 일어난다.
- ② 중층제에서 광역행정 및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은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주민과 가까이 있는 생활권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맡아 분담처리할 수 있다.
- ③ 단층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독,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 ④ 중층제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하기 어렵다.
- ⑤ 중층제보다 단층제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문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주민자치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 ② 근대국가에서는 국가가 부여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치권이 주어진다.
-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으로서 자치사법권이 인정된다.
- ④ 헌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 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자치조직권에 제약을 주고 있다.

정답 및 해설

3. ②
· ①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③ 단층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감독 및 통제한다.
· ④ 중층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단층제에서 중앙정부의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4. 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고유권이며 주민자치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② 근대국가에서 주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자치권은 국가 통치권으로부터 전래되는 것이다.
· ③ 우리나라는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문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처리를 게을리 할 때,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① 직무이행명령 - 대집행 ② 서면시정명령 - 취소
- ③ 회계감사 - 시정명령 ④ 정지 - 취소
- ⑤ 취소 - 대집행

문 6.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없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의원이 회의 중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지방의회의원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문 7.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의 8단계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통제 : 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한다.
- ② 협동관계 :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 ③ 회유 :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 ④ 상담 :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 ⑤ 치료 :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문 8.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의 참여가 투표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②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이 지역주민의 후보자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을 매개로 공천비리 등의 부패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질이 낮은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 ④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 지역문제가 전국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측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⑤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분할 구도가 혁신되어 국정의 통합성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및 해설

5. ①

· 지방자치법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항 및 2항: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④

- ①, ②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3.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③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1항: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7. ③

-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설득시키는 것은 조작 또는 계도에 해당한다.
 - * 아른슈타인이 분류한 주민참여
 - 1. 비참여: 조작(계도)(Manipulation) < 임시치료(교정, Therapy)
 - 2. 형식적 참여: 정보제공(Informing) < 상담(Consultation) < 회유(유화, Placation)
 - 3. 주민권력적 참여(실질적 참여): 대등협력(Partnership) < 권한위임(Delegated power) < 자주관리(Citizen control)

8. ⑤

· 정당참여를 인정할 경우 지역분할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문 9. 다음 중 「지방재정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실시 후 모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④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국회와 국무회의는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문 10. 다음 지문에 근거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시장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되었으나 유권자의 투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직을 면하였다.

- ① 주민소환 발의요건의 완화
- ② 주민소환투표 요건의 완화
- ③ 주민소환 대상에 대한 재검토
- ④ 주민소환 투표함 개봉요건의 재검토
- ⑤ 주민소환제도의 유용성 검토

정답 및 해설

9. ③

- ① 지방재정법 제5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55조 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재정법 제55조의3 제1항: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⑤ 제55조의2 제 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 2022년 기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로 조직개편

10. ①

- 지문의 내용은 이미 주민소환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발의요건의 완화는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1.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분권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 ④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문 1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인 기관통합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이다.
- ② 지방자치상의 모든 권한이 주민대표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③ 복수인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정부 조직에 있어서 권력남용의 방지, 행정의 전문화, 행정책임의 명백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⑤ 가장 전형적인 실례는 영국의 의회형과 미국의 위원회형 그리고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을 들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1. ⑤

-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보통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분권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분권교부세는 2015년 폐지되어 지방교부세로 통합되었다.
- * 2022년 기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로 조직개편

12. ④

- ④ 기관대립형에 대한 설명이다.

문 13. 다음 중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으로만 짝지은 것은?

- ① 수도사업 - 지방도로 - 주택사업
- ② 토지개발사업 - 주민복지 - 하수도사업
- ③ 지방도로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소방
- ④ 궤도사업 - 지방세 부과징수 - 공업용수도사업
- ⑤ 하수도사업 - 토지개발사업 - 공유림 관리

문 14. 우리나라 주민투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세 이상 주민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을 갖는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와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④ 주민투표 요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7일 이내에 발의할 수 있다.
- ⑤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문 15.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 및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보다 더 광범위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개괄주의에 의하지 않고 열거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조례안·예산안을 제출하며, 기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안하는 발의권을 가진다.
-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 16. 지방자치와 민주성, 효율성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설명이 옳은 것은?

- ① 무랭(Leo Moulin)과 랑그로드(Georges Langrod)는 지방 의원과 지방공무원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지역사회 위주의 행정에는 결과적으로 중앙집권보다 지방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양산해 낸다고 하였다.
- ③ 록번(Cynthia Cockburn)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였다.
- ④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집권적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을 넓혀 지방자치로 발생한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주장하였다.
- ⑤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중앙선거의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및 해설

13. ①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도도로사업만 해당한다),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지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4. ③

- ①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1항: 18세 이상의 주민 중...
- ②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주민투표법 제1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 ⑤ 주민투표법 제27조(주민투표경비) 제1항: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15. ②, ⑤(기존 정답 : ②)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와 달리 열거주의에 의하지 않고 개괄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광범위하다.
※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⑤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2022. 1. 13.)되면서 규칙의 제정범위가 넓어졌다.

16. ④

- ① 무랭과 랑그로드는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민주주의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② 토크빌은 민주주의론 저서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③ 록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 ⑤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였다.

문 17.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채란 사는 측과 파는 측 간에 원금과 일정률의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불하겠다는 금융거래상 합의서를 말한다.
- ② 지방정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 ③ 지방분권이 진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분권화도 촉진되어야 한다.
- ④ 지방채는 발행하는 회계의 소속에 따라서 일반회계채와 공기업특별회계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채로 나눌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발행할 수 있다.

문 18.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28일에 끝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설치할 수 있다.
- ③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 ⑤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문 19. 광역행정의 일반적 촉진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사회·경제권의 확대 ② 정책의 지역적 실험
- ③ 산업·경제의 고도성장 ④ 규모경제의 요청
- ⑤ 행정능력 향상의 요청

문 20. 다음 중 라이트(Deil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형식이다.
- ②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내포되어 큰 원과 작은 원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 ③ 동등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적기능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세 정부가 동시에 관여하는 일이 벌어진다.
- ④ 중첩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맺는다.
- ⑤ 내포권위형은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된다.

정답 및 해설

17. ⑤
·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2년 기준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로 조직개편

18. ③
· ①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41조 제2항: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9. ②
· 정책의 지역적 실험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20. ④
· ① 분리형(동등권위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② 내포형(내포권위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중첩형(중첩권위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중첩형(중첩권위형)에 대한 설명이다.